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양식 분석 연구

제16대 총선 후보자 사이버 게시판 분석을 중심으로

황 근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어느 길이 아고라에 가는 길인가. 아고라에는 법원과 평의회실, 그리고 공동 토론장들이 있다. 그렇지만 법률, 의사 결정, 토론이나 법령 작성 등과 같은 업무에는 대단한 불거리도 반향도 없다. 사법관의 강공(強攻)에 대한 귀족 정치결사의 술책, 집회, 연회, 플루트 연주자들의 흥겨운 파티 ... 거기에 끼여들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 플라톤 —

... 청년이여 나를 믿고 선택해다오. 나는 강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너는 아고라를 싫어하고 공중목욕탕에 가는 것을 삼가게 될 것이며, 모든 부끄러운 일들에 얼굴을 붉힐 줄 알게 될 것이다. ... 쓸데없는 잡담을 하거나, 억지 싸움이나 논쟁, 술책과 같은 시시한 일들로 허송세월 하는 대신, 감나 지온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 아리스토파네스 —

I. 머리말: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정보사회 담론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벨의 정치권력변화에 대한 예측(Bell, 1973)이나 권력분산을 강조한 앨빈 토플러 등의 주장(Toffler, 1980)들을 들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teledemocracy)에 대한 논의를 처음 전개한 아터튼(Artterton)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된다(Artterton, 1987). 특히

1990년대 들어 컴퓨터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사이버 민주주의(cyber democracy)’ ‘모뎀 민주주의(modem democracy)’ ‘인터넷 민주주의(internet democracy)’ ‘모자이크 민주주의(mosaic democracy)’ ‘버튼 누르기식 민주주의(push-button democracy)’ ‘키보드 민주주의(keyboard democracy)’와 같은 다양한 신조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다분히 정보통신기술이 ‘참여 민주주의’ 혹은 ‘준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함축하고 있다(강상현, 1996, 149-151쪽).

이처럼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다분히 기술 결정론적이고 매체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논의의 초점이 새로운 기술도입에 맞추어져 있어 비현실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논의 수준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던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Ess, 1996). 성급한 결론이기는 하지만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은 기술적 가능성보다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기술결정론적 낙관론 범주를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유진, 1997; 박선희, 1998, 2000; 강상현, 1999). 더구나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홍수 속에 낙관론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인터넷 정치의 현황과 문제점

이처럼 아직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낙관론적 견해가 더 지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체험적 전망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 인구가 이미 1천만 명이 넘어섰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제 인터넷은

소수이용자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화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선거홍보전략에 부심하고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홍보매체로서 인터넷을 무시할 수 없게된 측면이 있다.

둘째, 인터넷의 개방성과 쌍방향성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흔히 “텔레토비 동산의 그들만의 리그”에 비유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치는 일반 국민들과 거리가 먼 별개의 세계였다. 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의견은 정책에 잘 반영되지도 않는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치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론이 강한 것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극복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막걸리 선거 때부터 고착되어온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저렴한 비용 측면만으로도 호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¹⁾

결국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인터넷을 통한 선거 캠페인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열띤 토론은 기대 이상으로 호응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물론 총선시민연대가 인터넷을 이용해 낙선·낙천운동을 전개한 것이 하나의 촉발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분명 제16대 총선은 전자민주주의의 장래를 실험하는 하나의 시험대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열띤 논쟁을 벌였고 일부 상업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후보자간 사이버 토론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1) 이렇게 본다면 지난 제16대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즉, 기존 정치 및 선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대안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했다는 점은 정치개혁과 인터넷이라는 요소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제16대 총선의 인터넷선거운동은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와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에 발 맞추어 각 정당들과 후보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였다. 물론 아직 전시효과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단순히 홈페이지 개설 수준을 넘어서 정치매개로 활용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을 볼 수 있다. 새천년민주당(www.minjoo.or.kr)은 '21C n-Power,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새천년민주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클릭! 4·13 총선', '선택! 4·13 핫뉴스', '참여광장', '모여라 n-Power'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한나라당(www.hananara.or.kr)도 'Click 4·13', 'e-Hannara', '한나라 웹진', '사이버 카페' 등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도메인 상징탑 제막식을 갖기도 하였다. 자민련(www.jamin.or.kr)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와 주요 공약을 소개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후보자유세상황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민주국민당(www.change.or.kr)과 민주노동당 같은 군소정당들도 '웹메일 서비스', '온라인 당원가입', '인터넷 방송국' 등을 운영하였다.

권혁남(2000)은 지난 제16대 총선거간 중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선거운동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신의 프로필과 정책들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점, 둘째, 다양한 정치전문 사이트들이 생겨나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이고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했다는 점, 셋째, 일부이기는 하지만 후보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인터넷활용이 홍보수단을 넘어서 중요한 선거운동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 넷째, 총선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기간동안 활발한 사이버선거운동을 전개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선거등록직전까지 개설된 후보자 홈페이지는 대략 370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 그렇다

면 전체 지역구 출마자 1,038명 중에 약 40% 정도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가정한다면,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보자중에 대략 70% 정도가 당선된 것으로 추측된다.³⁾

물론 이 같은 각 정당들의 인터넷 선거홍보효과는 미지수이지만 지난 선거에서 모든 정당과 많은 후보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만은 분명하고⁴⁾,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10만 횟수가 넘었다고 주장한 후보자가 있을 정도로 일부 관심을 끌었던 것도 사실이다⁵⁾. 그렇지만 대부분 선거홍보전략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상적인 참여민주주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선희(2000)는 정부/정당/정치인들이 개설한 웹사이트의 문제점으로 ① 단순한 선거운동수단으로 활용 ② 게시판/토론과 같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③ 정치인들의 정보마인드 부족 ④ 정치인들간의 정보격차를 들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난 선거 때 만들어진 정치사이트들이 참여 민주주의 혹은 속의 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를 실현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다만

-
- 2) 실제 각 선거관련 사이트들이 집계한 후보자 홈페이지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전문사이트인 “당선”에서 조사한 yahoo에 3월 30일까지 등록된 홈페이지는 375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선거기간 중 yahoo에 등록된 후보자 홈페이지는 404개로서 조금 많았다. 또한 선거가 끝난 직후 yahoo에 등록된 후보자 홈페이지는 총 475개였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 홈페이지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김홍신 의원, 일부 등록된 홈페이지는 공천되지 않거나 출마를 포기한 후보도 있었다(김길부 등). 또한 어떤 후보자의 것은 제외된 것(정인봉 후보)도 있어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 3) 나도삼(2000)의 연구에 의하면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보자 397명 중에 265명이 당선되어 당선율이 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그러나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후보자 사이트들이 선거캠페인을 위해 급조된 것이 많고, 일부 사이트들은 상업적 목적이나 이벤트성의 사이트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 제16대 총선거기간 동안의 각종 관련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도삼(2000)을 참조할 것.
 - 5) 정치전문 사이트 포스닥(<http://posdaq.co.kr>)에서는 2000년 4월 5일 정동영 후보의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게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각 후보자나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었던 의견제시와 토론이 그나마 전자민주주의 양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자민주주의를 “① 정치 커뮤니케이션 주체인 정부/정당/정치인과 시민/시민단체/이해집단이 ② 컴퓨터를 매개로 ③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적 사안에 대한 쟁점을 ④ 교환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커뮤니케이션과정을 통해 ⑤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달성되는 민주주의”(박선희, 2000)라고 정의한다면, 현재 수준에서 전자민주주의의 수준 및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단초는 전자게시판 정도라고 생각된다.

2. 전자민주주의의 특성과 전망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다수 인터넷 정치나 전자민주주의론은 쌍방향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대체로 사이버 공간이 일반 시민들의 정치소외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정치과정 자체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옮겨져 고대 그리스시대의 직접민주주의를 사이버 공간에서 재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모든 시민들이 손쉽게 정치정보에 접근해 공유하게 되고, 시민과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즉각적인 정치 정보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모든 시민이 공공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구나 정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의사표시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상론적 전자민주주의론의 골자다.

전자 민주주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London(1995, p.33-55)은 전자민주주의 형태를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와 속의 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로 분류하고 있다. 원격민주주의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사상의 공개시장을 형성해 공적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참여도 증진시키는 형태라면, 속의 민주주의는 시민들간의 자기 성찰과 숙의를 통해 질적으로 성숙된 민주주의 형태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가 주로 정보제공차원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성향을 극대화하는 전자민주주의 형태이고, 후자는 공적 토론을 강조하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분류는 민주주의 형태를 시장모델(the market model)과 민주주의모델(the democracy model)로 나누고 있는 Sunstein(1995, p.1759-1762)의 주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⁶⁾ 시장모델은 표현시장의 순기능(well functioning speech market)을 지향하는 모델로 진리발견의 수단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주의모델은 민주적 자기통치(democratic self-government)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모델로서 속의 민주주의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민주주의 모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적인(reflective) 그리고 숙의적인(deliberate) 토론의 수단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공적 숙의시스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그렇지만 Sunstein은 속의 민주주의 실현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기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은 속의 부재(absence of

-
- 6) 유사한 분류는 시장민주주의와 속의 민주주의로 나누고 있는 Glasser의 주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Glasser(1999)를 참고할 것.
- 7) Sunstein은 표현의 자유의 궁극적 목표인 민주적 자기통치는 의견의 다양성과 공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시장체제로는 의견의 다양성과 공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방송에 대한 각종 규제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할 수 있다는 급진적 입장에 서있다. 같은 논리에서 액세스권 역시 헌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고, 신문 역시 자율성이나 재산권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제한 받고 사실상의 독점을 누리는 상황에서 신문의 질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Sunstein은 선정주의, 공공문제에 대한 피상적 보도, 상업주의, 편파주의, 폭로주의 등 언론의 각종 병폐 원인을 현행 미디어 제도를 만든 미디어 법의 문제점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그는 표현의 자유제도에 대한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Sunstein(1993, p.213-224, 1993, p.81-88)을 참조할 것.

deliberation), 사회적 분절화(social balkanization), 고립화(self-insulation)의 가능성이 있고(Sunstein, 1995, p.1785-1787), 이것은 정치적 시민 양성과 정치적 평등을 촉진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상향식, 비계층적 구조와 쌍방향 성격의 매체를 이용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전자민주주의를 기존 정치과정의 대체물 또는 전술적 대안으로 보고, “토론과 설득을 통한 상호이해와 연대의 확장과정으로서 참여민주주의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한상희, 1998, p.54-60).

강상현(1999)는 전자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개인 정보습득 → 개인 의견형성 → 집단 토론 및 여론형성 → 집단적 정치행동의 점진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물론 반드시 단계별(step by step) 과정은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점진적 이행과정을 거쳐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전자민주주의 이행 정도는 아직 개인 정보습득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토론과 여론형성이라는 속의 민주주의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1>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민적 정치 참여의 단계별 유형*

수준	참여유형	유형별 형태	정보통신 서비스	비고
개인	정보 습득	공공문제에 관한 정보검색과 인지	각종 정보제공 사이트	그 밖에 시민운동 단체나 통신 동호회 등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치참여도 가능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 공존·공유)
	의견 형성	개인적인 숙고와 의견형성·표출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집단	정치 토론	집단적인 토의와 여론 형성	공공게시판 토론방 / 대화방	
	정치 행동	집단적인 의사결정과 실행	전자투표 / 캠페인 (항의성) 전자우편	

* 강상현(1999)에서 p.149에서 인용

반면에 박선희(2000)는 전자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단선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전자민주주의의 형태는 국민투표적 민주주의(plebi-

sciatory democracy), 숙의 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 공동체 민주주의(communitarian democracy), 다원적 민주주의(pluralistic democracy)로 분류될 수 있는데, 결국 숙의 민주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지만 단선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전자민주주의 논의들은 공통점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전자민주주의가 기술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회결정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행과정이 점진적일 수도 있고 선택적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쌍방향적 공적 논의와 공동체의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논의가 전반적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전자민주주의가 불가피하게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기술적 가능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정치인, 시민과 같은 정치행위자들이 최종 변수라고 하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의 조건을 평가하고 성숙시키는 것은 전자민주주의의 장래를 가능하는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실제로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부터 인터넷 내용분석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발표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들 다수가 이론적으로는 숙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숙의 민주주의는 “숙의 또는 공적 숙의가 합리적이며 고품질의 여론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의 건전한 기초를 강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박승관, 2000, p.163). Allen(1995, 박선희, 2000, p.71에서 재인용)은 숙의 민주주의를 “어떤 이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구성원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그 이슈에 대해 생각하고 숙

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달성되는 민주주의”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속의 민주주의는 의견의 교환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중시 여기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다분히 이상적이고, 개인이나 공적 속의과정이 속의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지 아니면 결과인지 혹은 이상형(ideal type)인지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박승관, 2000, 176-178쪽 참조).⁸⁾ 특히 속의 과정을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윤영철, 2000, p.115). 또 London(1995)의 지적과 같이 냉정한 사색이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대안적 이슈에 대해 배타적 집단 의식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과연 진정 대중들이 공적 토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⁹⁾

-
- 8) 다만 박승관은 현재의 주류적 시각은 속의 민주주의가 속의과정에서의 ‘개인성’과 ‘시민성’의 독립변인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속의의 결과로 개별적 인간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수준높은 개인성과 시민성을 개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진보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각은 속의를 가능하게 하는 장(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성과 개인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술결정론적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정보교류를 분석한 Hacker(1996, p.227-228)의 결과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정보의 상호교류(political interactvity)가 없다는 점에서 수평적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 시민, 학계의 상호교류, 올바른 CMC활용을 위한 시민교육, 가상공간의 여론의 정책반영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자의 판단으로도 이 같은 실증적 결과에 비추어 ‘개인성’과 ‘시민성’이 전자 속의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강상현(1999, p.155) 역시 시민적 역량이 사이버 공간 민주화의 가장 핵심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 9) London의 지적은 사이버 공간에서 속의 민주주의를 논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자 과제라고 생각된다. 즉,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다수의 대중은 오락적이고 개인 취향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사이버 공간이 공적 토론영역화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뒷부분의 네티즌에 대한 설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현재 사이버 공간은 기업의 비전(corporate vision), 정부의 비전(government vision), 공익적 비전(public interest vision)들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이며(Jacobson, 1996), 공동체주의자(communitarian), 민주적 동원세력(democratic mobilization), 동일취향집단(like-minded exchange), 기술적 엘리트

숙의 민주주의론은 하버마스가 제기한 공공 영역(public sphere)의 논의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Habermas, 1989). 즉,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는 이상적 발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이 숙의 민주주의론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Habermas, 1984). 한 마디로 사적 인간들이 모여 공중으로 되는 공공영역이 숙의 민주주의론자들이 지향하는 숙의가 일어나는 공간인 셈이다. 다시 말해 접근의 공개성, 표현의 자유, 상업적 이해로부터의 독립, 자발적 참여 등과 같은 공공 영역의 특성은 곧 숙의 공간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하버마스의 공공 영역이론은 숙의 민주주의론자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고 또 비판받기도 하였다.¹⁰⁾

그러면 이 같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대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신문과 TV라는 현대 정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들이 많은 사회구조적 이유들로 인해 진정한 숙의 과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온바와 같이 지금 매스 미디어는 상업적 이해와 정치권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적 영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공적 영역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Dahlgren은 매스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 공적영

(technological elitism), 대중조작기도세력(manipulation and domination)들 간의 경쟁의 장이라 할 수 있다(Fisher, Magolis & Resnick, 1996; 오택섭, 1997, 2000 참조).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사이버 정치공간은 역시 이러한 세력들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常數로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0) Habermas의 공공 영역에 대한 비판은 여러 측면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공영역이 부르조아 공공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소수 엘리트 중심의 공공영역을 이상적이라고 보는 점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상주의(utopianism)가 아니라 삶에 대한 비극적인 측면(view)”이라고 한 Garnham의 비판을 들 수 있다(Garnham, 1992). 그렇게 본다면 Habermas의 공공영역을 논거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자숙의 민주주의론은 분명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비판이 일견 타당한 면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역의 문제점을 미디어 제도(media institution), 미디어 내용(media representation),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사회·문화적 상호작용(socio-cultural interaction)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Dahlgren, 1995). 즉, 미디어 제도 측면에서 가부장적(paternal)인 공영방송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상업방송 역시 시장상황으로 인해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 내용 측면에서 언론사의 조직적 프레임, 사적 담론과 공적 담론의 불투명성, 매스미디어의 정서적/취향적 제공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시민들간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인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에 있어 진정한 공공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공유적인(communal) 상호작용이 지배해야 하는데 무질서하거나(discursive) 순환적인(spatial) 상호작용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¹⁾

이러한 현대 미디어 정치의 문제점들은 구조적인 것으로 자본주의라는 틀 내에서 개선될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개혁될 수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속의 민주주의론은 부득이 사이버 공간과 같은 대안적 매체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수직하향적이고 일방적인 매스미디어로서는 수평적 속의가 가능한 공공영역 성립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한계를 체감한데서 나온 대안일 수도 있다. Dahlgren(1995, p.11-21)의 주장과 같이 하버마스의 공공 영역은 대인 커뮤니케이션(face to face communication)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가

11) Dahlgren의 이러한 상호작용의 분류는 다분히 자의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 다만 무질서한(discursive) 상호작용이나 순환적인(spatial) 상호작용은 다분히 상황 제한적이고 우연적이어서 시민으로서의 상호작용을 억제한다고 본다. 반면에 공유적인(communal) 상호작용은 시민들간에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하게 되어 공적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구성적 담론(constructive talk)을 제안하고 있다. 구성적 담론이란 구조화된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대화가 사회적 세계를 생산해내는 과정으로서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여기서 그는 Giddens의 구조화이론이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의 이론과 접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의 개선을 위해 인터넷공간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속의 민주주의 주장과 연계되고 있다.

지배하는 ‘매개화된 공공성(mediated publicness)’ 상황에서 공공 영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속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만 재현 가능한 것이다(Warf & Grimes, 1997; Cleaver Jr., 1998; Johnson, 1999). 이것이 바로 속의 민주주의가 사이버 공간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고, 전자민주주의의 지향점이 속의 민주주의의 일수밖에 없는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속의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 있는 전제조건들에 대해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 전제조건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근접한 표현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과 그것이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공공적 조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가 주로 기술적 가능성(feasibility)이라면 후자는 다분히 개인적·사회적 윤리(ethics)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4. 사이버 공간에서 속의 민주주의 구현의 조건

박승관(2000)은 속의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으로 ‘개인성(individuality)’과 ‘시민성(civility)’을 들고 있다. 근대의 출발은 개인성의 성장을 가져와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을 진화시켰고, 그후에 등장한 시민성은 ‘공적 영역(public sphere)’을 태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성과 시민성을 속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개인성을 ‘자기자신의 의견의 단순한 표현 또는 반복’으로, 시민성은 ‘쟁점의 양면에 대한 고려’로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인성이 ‘말하기 모형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시민성은 ‘듣기 모형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다.

Fishkin(1998)은 속의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으로 ① 정치나 공공문제에 관해 상세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② 지속적인 성찰과 토론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어

야 하고 ③ 타당성을 견줄 수 있는 논증에 근거한 정보가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결국 숙의과정에서 동일한 시각이나 비합리적인 주장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라 하겠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은 숙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쌍방향적으로 충분히 유통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매스 미디어는 그 중에 어느 한 요소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곧 현대 민주정치 쇠퇴현상의 원인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혹은 왜곡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적 배경에서 공공 영역 논의를 전개해온 하버마스, 듀이, 아렌트¹²⁾ 중에 하버마스와 듀이의 주요 문제의식이 커뮤니케이션문제에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러한 점을 잘 알 수 있다 (Dahlgren, 1995, p.7). 이렇듯 현대 매스 미디어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양식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Peters(1993)는 하버마스의 공공 영역론이 각광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그의 이론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이유는 충분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개방된 토론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그 공간에서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 공간이 개방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그 공간에서 공공문제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12) 이에 대해 박승관(2000, p.172-174)은 Arendt의 공공 영역 역시 '위하여 말하기(to speak for)'나 '반하여 말하기(to speak against)'가 아닌 '더불어 말하기(to speak with)'가 실현되는 시민성이 충만한 공동체적 마당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1) 개방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 기술적 가능성

분명 인터넷은 속의 민주주의 조건인 자유롭게 상호 의견이 개진되고 토론이 가능한 기술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공간은 현재 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해주고 새로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준다 하겠다. 사이버공간이 속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방향적인 매스 미디어와는 달리 사이버공간은 쌍방향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매체 접근이 개방되어 있어 개인의 지위와 무관하게 다양한 부류의 시민들이 동등하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내용에 대한 편집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인해 정보가 왜곡되지 않는다. 넷째,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다. 다섯째, 익명성이 보장되어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Boncheck, 1997, 윤영철, 2000에서 재인용).

이처럼 사이버공간은 기술적으로 속의 민주주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이 같은 기술적 조건들만으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떤 정치체제든지 성패여부는 실행양식에 더 크게 의존하기 마련이다.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정치 위기 현상 역시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인간의 문제가 더 큰 원인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아마도 사이버공간이 가진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양식구조에서 비롯된다 생각된다. 즉, 사이버 공간 자체가 민주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취약한 커뮤니케이션 구조라고 하는 점이다. 흔히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은 “익명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개방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자율성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홍성태, 1999).

첫째,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은 ‘접속에 의한 비대면적 만남’이라는 데서 발생한다. 즉, 서로 어떤 사전 정보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기초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는 ‘탈맥락적 공간’인 것이다. 이 같은 익명성은 진솔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과되지 않은 감정이 남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직접 대면적 만남에서는 ‘아는 만큼 지배하고 알려진 만큼 구속된다’는 원리가 작동하지만, ‘사이버공간’의 익명적 만남은 이 원리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나 있는 ‘무중력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무중력 공간’에서의 만남은 흔히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기 마련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이버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실명으로는 불가능한 표현들도 게시판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한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욕설이 난무하는 극단적인 싸움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익명성은 ‘사이버공간’을 배설과 소음의 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하버마스(1989) 등이 가정했던 합리적 공적 토론 및 속의가 사이버 공간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근거인 것이다. Perrolle(1991)과 Poster(1997)는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정보의 신뢰성과 이용자의 책임감을 약화시켜 비타협적인 논쟁만이 지속될 뿐 합리적인 토론이나 합의는 도출되지 않게 되어 하버마스의 공공 영역은 가상공간에서 적용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요인은 개방성이었다. 이러한 개방성은 사이버 공간을 무수한 사람들간에 다양한 형태의 이합집산을 가능하게 하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개방성은 합의되지 않고 무질서한 의견이 산만하게 떠다니는 시장바닥과 같은 극단적인 혼란과 우중정치를 만연시킬 수도 있다. 결국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과 구호만이 가득 찬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갈등이 상충되는 ‘사적 공간이 확장된 영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¹³⁾

13) 인터넷 공간의 개방성으로 인해 공공적 성격을 침해할 수 있는 세력으로 가장 많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정보고속도로나 인터넷의 상업화현상이다. Besser(1995)는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해 상업적 이해집단이 이 공간을 지배할 경우에, ‘정보의

이에 대해 Rheingold(1994)는 미국의 인터넷은 이미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착취의 장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상업화와 정치적 통제로 인해 왜곡된 매스 미디어 공간과 차별화되는 속의 민주주의 토론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Jacobson(1996)이나 Fisher 등 (Fisher et al., 199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 공간은 현재 여러 이해 집단들이 갈등하는 가변적 공간이라고 하겠다. 또한 Dahlgren(1995)이 이상적인 공공영역내의 상호작용이라고 공유적(communal) 상호작용은 기대하기 어렵고, 도리어 기존 매스 미디어보다 더욱 무질서하고(dis-cursive) 우연적 상호작용이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Leary(1994)가 네티즌을 ‘사이버네틱 사회’의 새로운 조타수 즉,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사람들’로 정의내린 것처럼 사이버공간의 주체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항로를 찾아내고 변경하며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해야’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즉 사이버공간 참여자들의 자율성은 ‘사이버공간’의 가장 강력한 도덕적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속의 민주주의 공간으로서 사이버공간의 가능성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윤리적 문제 즉, 시민성의 문제로归结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이버공간은 이중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그래 왔듯이 인터넷 역시 민주적 활용가능성과 반민주적 활용가능성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Teranian (1990, p.19-53)이 말하는 ‘이중적 가설(the two hypothesis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이 적용되는 영역인 것이다.

2) 사이버공간에서의 시민적 조건

결국 사이버공간에서 속의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개인성’과 ‘시민성’이라고 하는 참여자들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덕목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매스 미디어를 통한 미디어정치는 개별 시민들

공유’라는 정신에서 성장해온 인터넷의 개방성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의 ‘개인성’이 반영될 여지가 없어¹⁴⁾, ‘개인성의 표현’ 역시 정보제공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의식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일반 시민들의 정치무관심 및 냉소주의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Crotty & Jacobson, 1980; Dionne, 1991). 따라서 공공 영역의 왜곡현상 역시 미디어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여전히 일반 시민들은 수동적 위치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개방형 매체인 인터넷은 진정한 공공영역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¹⁵⁾ 결국 개인성의 표현¹⁶⁾

-
- 14) 매스 미디어에 표출된 개개 시민의 개인성은 미디어 조직 혹은 사회제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표준화되거나 보편화된 의미의 개인성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의견 혹은 지배 여론과 같은 기준으로 매스 미디어가 규격화하여 결정한 개인성이다. 그와 같은 공공적 역할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가부장적(paternalism) 공영방송과 같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상업 언론에서 추구하는 최대 다수가 원하는 정보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디어에 의해 매개화된 개인성은 진정한 의미의 개인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15) 박선희(2000)는 인터넷상의 정치토론공간이 주로 정치인이나 정부/정당 등에 의해 제공되고 주도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물론 이 지적은 아직 정치 웹사이트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의 선거홍보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점차 여러 주체들에 의한 정치토론공간이 많아질 것이고, 비록 게시판 운영주체는 정치인이나 정당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의 특성상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운영주체의 문제는 점차 그 무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리어 나도삼(2000)의 지적처럼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설된 정치사이트들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된다.
- 16) 본 연구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박승관(2000)은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집단적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을 ‘개인’으로 변환시켰다고 본다. 물론 전통적인 ‘집단성의 지배체제’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그것이 원천으로 독립된 개인이었는데 대해서는 의문이다. 도리어 근대사회 이후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전통적 집단에 대한 구속이 아닌 새로운 사회집단으로 재편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Gitlin(1995)의 주장과 같이 더 커다란 사회체제로(예를 들면, 정치이데올로기와 같은) 귀속성이 이전된 것일 수도 있다. 도리어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주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여성, 인종, 노동자와 같은 이해집단과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어온 개인이 최근에 와서야 ‘자기’를 찾는 정치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은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여¹⁷⁾ 속의 민주주의로 가는 한가지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준 셈이다. 즉, Abramson(1995)이 가상공간에서 민주적 속의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메시지들이 충분한 기간동안 교환되어야 하고 상호작용성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시킨 셈이다. 그렇지만 동일 인물에 의한 순환적 반복이나 즉각적 반응으로 인해 속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 등과 같은 참여자의 행동은 여전히 속제로 남는다.

그렇다면 자연히 인터넷 공간에서 이상적인 공적 영역이 형성되고 속의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역시 시민성 즉, 행위주체자의 합리적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관건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실제 조사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시민성 요건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Perrolle(1991)이나 Poster(1997)의 지적과 같이 인터넷은 익명성으로 인해 욕설과 비방이 연속되는 감정적이고 비타협적인 공간이 되고 있고, 게시판에서의 논의는 속의를 거치지 않은 극단적인 주장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형태가 지배하고 있다(Strek, 1998, p.18-47). 실증적 연구결과는 많지 않지만, 윤영철(1998, 2000)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이버 게시판 역시 개방성과 참여도는 비교적 높지만, 근거 있는 주장의 부족, 반복된 주장, 욕설과 비방, 타협점 없는 의견대립, 집단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의 지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선희(2000) 역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표현적 요소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정치인이나 네티즌 모두 컴퓨터 매개정치에 소극적

는 점이다(Denton Jr. & Woodward, 1998, p.19-33). 한편 Sennett(1977)는 현대를 ‘친교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intimacy)시대’라고 보고, 그것은 바람직하고 타당한 사람들간의 관계를 폐쇄성(closeness)으로 규정해 공공영역은 죽은 영역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근대사회의 등장으로 개인이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 17) 물론 컴퓨터 네트워크의 접근과 이용능력, 나아가 사회경제적 능력차이에 의한 진입장벽은 사이버 공공 영역을 형성하는데 난점 중에 하나이고 정책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기술적 차원에서는 최소한 평등성이 보장되었다는 의미다.

이며 현실정치와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은 인터넷을 홍보 수단으로 인식하는 반면 네티즌은 사적이고 오락적인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참여자들이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사이버 토론장에서 네티즌들이 특정이슈에 대해 숙고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같은 공동체적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로는 성숙한 정치문화의 부재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네티즌 문화의 미성숙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netizien)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Hauben(1997)은 “네티즌은 단순히 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네트의 문화를 만들고 네트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의미함축적인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인터넷 사용 정도와 관계없이 공동체적 관점을 소지하고 있는가를 더 중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네티즌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적 활동주체이어야 한다(백옥인, 1999). 네티즌은 네트의 시민 즉, 온라인 토론과 질문, 상대방에 대한 논평, 그리고 조언이 오가는 유즈넷(usenet)의 특성과 공동체적 특성을 담고 있어 속의 민주주의의 시민성을 갖춘 집단과 유사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한마디로 네티즌이라는 용어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 참여와 그에 기반한 공동체라는 공적 영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네티즌에 대한 정의는 매우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것은 마치 공공 영역이나 속의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시민을 가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물론 속의 민주주의가 개인성과 시민성을 배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성과 시민성이 속의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인지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전자의 입장이라면 속의 민주주의적 공간을 제공하는 주체가 많아짐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후자의 입장이라면 인터넷 공간의 정치토론자 아니 전체 네티즌의 참여행위양식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없는 한 속의 민주주의는 요원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 영역이 “획일화되고 환원된 공동선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분화(fragmentation)되고 갈등(struggle)하는 영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응집되고 확고한 연대감(solidarity)을 가진 영역(Walzer, 1992, p. 97)”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인터넷 공간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의 집단이 경쟁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 문제

앞에서 논한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기간 중 개설된 후보자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물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 우리나라 사이버 정치공간에서의 토론이 속의 민주주의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 ?

이와 같은 연구문제 아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세부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① 후보자 정치게시판 토론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주로 누구이며 그

들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② 후보자 정치게시판에 올려진 게시물의 내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③ 사이버공간의 익명적 속성이 정치게시판 토론에 미치는 특성은 무엇인가?

④ 후보자게시판의 단순 방문자(lurker)들이 게시물 내용에 접근하는 행태는 어떠한가?

2. 표본의 선정 및 연구방법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지난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출마했던 전체 후보자 1038명중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보자를 추출하였다. 중앙일보 JOINS에 개설된 총선후보자 정보란, Yahoo Korea의 제16대 총선 후보자 사이트안내, 사이버정치증권사이트 Posdaq, 선거 전문 dangseon 사이트에서 홈페이지 주소가 확인된 475개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5개 간격으로 체계적 표집을 실시하였다.¹⁸⁾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추출된 후보자는 82명으로, 지역적으로는 서울(32개), 경기·강원(9개), 충청(10개), 영남(11개), 전라(20개) 순이었다. 후보자 당선유무와 관련해서는 현역의원으로 당선자 11명, 비현역의원 당선자 12명, 현역의원 낙선자 7명, 비현역의원 낙선자 52명이었다.

이렇게 선정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 게시판 내용을 5명의 코더가 분담하여 코딩작업을 실시했는데, 사전에 몇 개 사이트에 대한 예비코딩 과정을 거쳐 코더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코딩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애매한 것은 연구자가 확인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8) 그러나 1차 표집된 95명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결과,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게시판 및 자유토론이 없는 경우, 비례대표인 경우, 최종적으로 출마하지 않은 후보 등이 발생하였다.

코딩 유목은 게시판에 포함된 내용은 분석하기 위해, ① 게시판에 올려진 의견 개수¹⁹⁾ ② 작성자 유형 ③ 실명 여부 ④ 내용의 긍정·부정 여부 ⑤ 내용 서술의 형식 ⑥ 댓글(응답·재질문·반론) 유형 ⑦ 댓글(응답·재질문·반론)의 주체 ⑧ 게시물의 주체 ⑨ 방문자 회수 등으로 정하였다. 더불어 후보자의 ① 소속정당 ② 현역여부 ③ 당선여부 ④ 연령 등을 추가로 코딩하였다.

실제 코딩작업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4월14일부터 4월18일까지 5일간 실시했으며, 분석대상은 4월 12일 22:00(선거운동종료시간)까지 게시된 게시물로 제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dow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I. 후보자 홈페이지 게시판 분석 결과

조사된 82명의 후보자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려진 글은 총 4,210개로서, 한 후보자 홈페이지에 실린 게시판 글은 평균 51.3개였고, 표본 중에 가장 많은 게시물이 올라온 홈페이지는 허태열 후보(부산 북·강서을구)의 홈페이지로 303개였다.²⁰⁾ 반면에 표집된 홈페이지 중에 10개

19) 올려진 게시물은 기본적으로 번호가 붙여진 의견들만 측정하였다. 그리고 동일 번호 내에서 이어진 게시물은 댓글(편의상 윤영철(2000)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응답게시문으로 별도 코딩하였다.

20) 허태열 후보가 출마한 지역은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민주당의 전 부산시장 문정수 후보가 경합을 벌인 지역으로 지난 제16대 선거의 최대 관심지역이었다. 즉, 인물론으로 지역구도 타파를 주장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지역 프리미엄을 배경으로 한 한나라당의 허태열 후보, 전 부산시장으로 정치적 재기를 노린 문정수 후보간 경합으로 모든 선거이슈가 모두 드러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선거이슈는 “DJ정권심판론”, ‘제2의 이인제론’, ‘영남정권 창출론’, ‘이회창 대권불가론’, ‘지역발전론’, ‘큰 인물론’, ‘시민단체 낙선·낙천운동’, ‘병역·납세의혹’, ‘전과기록’ 등 이번 선거에 제기된 모든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선거구였다. 특히 우리 선

미만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 8개였으며, 가장 적은 게시물이 올라온 후보자사이트는 전북 정읍에서 출마한 이의관 후보로서 1개의 게시물만 올라와 있었다.

1. 후보자 게시판 토론 참여자 및 커뮤니케이션 양식 분석

게시판 담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정치적 성향이나 태도와 같은 것은 알 수 없지만, 사이버 정치공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의 문제는 사이버 전자민주주의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일단 게시판에 실린 게시물 작성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 1,994개(40.2%)를 차지하고 있는 해당지역의 유권자들이어서 일단 사이버공간 토론 참여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은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보자 혹은 후보자 소속정당 관리자로서 796개(18.7%)였다. 그렇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752개(17.9%), 광고나 장난과 같은 내용으로 역시 담론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115개(12.7%)나 되어 사이버 게시판 공간의 개방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단 게시판 참여자 유형만 가지고 본다면, 참여정치라는 이상적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30%가 넘는 담론들이 주체를 알 수 없는 것이어서 토론의 집중성과 속의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공적 토론 및 속의 공간으로서 후보자 게시판은 '절반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 같은 게시물 작성주체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이 의견에 대한 응답/재질문/반론제기와 같은 댓글의 작성자이다. 댓글은 모두 542

거의 최대 쟁점인 인물투표와 지역투표가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으로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조성대, 2000).

개로서 전체 게시물 4,210개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 2월에 조사한 윤석년(2000)의 조사 26%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아마 그 이유는 선거운동기간에 들어서면서 게시물이 폭주함으로 인해 특정 게시물에 대한 주장과 반박/질문과 같은 집중적인 토론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점과 토론가치가 없는 게시물이 많아지면서 응답/반박 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주제에 대한 토론형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토론/응답형식이 아닌 새로운 게시물 형태로 올린 경우가 많았던 이유도 있다 하겠다.

특이한 것은 댓글의 경우에 게시물 작성자가 후보자 및 소속정당 관리자가 올린 것이 268개(49.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116개(22.1%)인 해당지역 유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게시물이 97개(17.9%)나 되어 게시물 주체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게시물 작성자에서 12.7%나 되었던 광고나 장난과 같이 주체를 알 수 없는 댓글은 전혀 없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토론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댓글이 상대적으로 진지한 토론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2> 후보자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자 유형분포

	해당지역 유권자	후보자 소속정당	상대정당 후보자	다른지역 유권자	친구·친척 후원자	중앙당·후보 상호지원	광고 장난	기타	전체
게시문 작성자	1,694 (40.2)	796 (18.9)	31 (0.7)	130 (3.1)	159 (3.8)	115 (2.7)	533 (12.7)	752 (17.9)	4,210
댓글 작성자	116 (21.4)	268 (49.4)	15 (2.8)	12 (2.2)	3 (0.6)	31 (5.7)	-	97 (17.9)	542

* 광고·장난을 동일한 게시물 작성자분류에 포함시킨 이유는 대부분 익명이거나, 광고의 경우 선거와는 무관한 회사·단체 혹은 개인으로 연구목적상 별도 분리해서 코딩하였음.

문제는 게시물 작성은 해당지역 유권자들이 주도하고, 이에 대한 응답은 주로 후보자나 후보자 소속정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민들간 토론보다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의문을 제기하면 해당

후보자가 응답하는 토론 아닌 일문일답식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3>을 보면 이러한 특성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단순응답이 전체의 81.0%(439개)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론제기는 11.1%(60개), 재질문은 6.3%(3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시판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토론방식이 아닌 의견제시와 이에 대한 응답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댓글 작성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후보자 및 소속정당에서 작성한 댓글 중에 94.8%(254개)가 단순응답이고, 중앙당 및 후보자간 상호지원자들이 작성한 댓글도 90.3%(28개)가 단순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질문이나 의견에 게시판 운영주체인 정당이나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이 많았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지역유권자들의 경우에도 단순응답유형이 74.1%(86개)로 많기는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절대로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상대방 후보자나 정당이 작성한 댓글은 반론제기적 내용이 40.0%(6개)로 대조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후보자 게시판 공간이 다분히 홍보목적을 가진 후보자와 정당측의 관리자와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간의 폐쇄된 공간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즉,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공적 영역이 아니라 지지자들의 '자기확신공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문은 우선 게시판 공간에 올려진 게시물의 성향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단 게시물들의 절반 이상인 52.5%(2,210개)가 긍정적 표현물인 반면, 부정적인 내용은 불과 14.4%(606개) 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각 후보자의 게시판을 방문하고 게시하는 사람들 다수가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 집단이라는 점을 추측하게 해준다.

특히 게시물 내용의 성격과 그것을 작성한 작성자와의 관계를 보면 그러한 점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보자 및 지지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 및 정당(84.6%), 친척·친구·

<표-4> 게시물 작성자와 성향 교차분석

	게시문 성향			전체	
	긍정문	부정문	중립		
게시문 작성자	지역 유권자	1,066(67.7%)	364(23.1%)	144(9.1%)	1,574(100%)
	후보자 및 정당	522(84.6%)	28(4.5%)	67(10.9%)	617(100%)
	상대 후보자 정당	9(37.5%)	11(45.8%)	4(16.7%)	24(100%)
	다른 지역유권자	66(58.4%)	27(23.9%)	20(17.7%)	113(100%)
	친구·친척·후원자	119(92.2%)	2(1.6%)	8(6.2%)	129(100%)
	중앙당, 후보지원	102(96.2%)	3(2.8%)	1(0.9%)	106(100%)
	기타	269(51.1%)	157(29.8%)	100(19.0%)	526(100%)
	전체	2,153(69.7%)	592(19.8%)	344(11.1%)	3,089(100%)

* 연구목적상 게시물유형 중에 '기타' 유목과 게시물작성자에게 '장난·광고' 유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Pearson Chi-square=575.121, df.=12, sig.<.000

후원자(92.2%), 중앙당 및 동료 후보자(96.2%)들이 작성한 게시물들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게시판 참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유권자들의 경우에도 67.7%가 긍정적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게시판이 상반된 쟁점이나 토론의 장이 아닌 지지후원의 장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후보자 웹사이트 게시판 공간은 합리적 토론과 숙의가 형성되는 공공 영역이라기 보다 해당 후보자의 지지세력들의 '자기확신의 장'이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캠페인의 한 수단으로 활

<표-3> 댓글의 작성자와 유형간 교차분석

	응답 유형				전체	
	단순응답	재질문	반론제기	기타		
댓글 작성자	지역 유권자	86(74.1%)	12(10.3%)	16(13.8%)	2(1.7%)	116(100%)
	후보자 및 정당	254(94.8%)	4(1.5%)	9(3.3%)	1(0.4%)	268(100%)
	상대 후보자 정당	4(26.7%)	5(33.3%)	6(40.0%)		15(100%)
	다른 지역유권자	8(66.7%)		3(25.0%)		12(100%)
	친구·친척·후원자	2(66.7%)		1(33.3%)	1(8.3%)	3(100%)
	중앙당, 후보지원	28(90.3%)	2(6.4%)	1(3.2%)		31(100%)
	기타	57(58.8%)	11(11.4%)	24(24.8%)	5(5.2%)	97(100%)
	전체	439(81.0%)	34(6.3%)	60(11.1%)	9(1.7%)	542(100%)

* Pearson Chi-square=101.426, df=18, sig.<.0000

용되는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즉, 게시판 공간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간의 토론공간으로서 보다는 각 후보자의 개인신상, 정치활동, 주변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지배적인 후보자 개인 홍보공간(윤석년, 2000)적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유진(1997)이나 박선희(2000)의 지적과 같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아닌 수직하향적 성격의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게시판 운영주도권이 후보자 측에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영철(2000)의 연구결과와 같이 게시판이 타협을 모색하는 공간이 아니라 적극적 이용자 아니면 지지자들이 집단내 결속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본 조사 결과 역시 후보자 캠페인 주도층과 이를 지지하는 지지세력, 그리고 후원세력간에 감정적 동질감을 확인하는 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Beniger(1996, p.56-57)의 지적처럼 ‘가상공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과 ‘가상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사이버공간은 후자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그 집단이 상업적 이해집단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세력이라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Arterton이 전자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과 전자공간에서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만남이 정치인들의 홍보적 목적에 이용된다고 지적한 Grosswiller(1988, p.133)의 주장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정치게시판은 개방된 공간이 아닌 암묵적으로 배타적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2. 게시물 내용의 특성 분석

앞에서 분석한 게시판 공간의 참여자와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전자민주주의의 구조적 특성이라면 게시물내용은 그 구조 내에서 논의되는

<표-5> 게시물 내용 주제 및 표현 형식간 비교 분석

	게시물 내용 형식*					전 체	
	논리서술형	논리·의문형	감정서술형	감정의문형	기타**		
게시물 주제	정치전반·중 앙정치	192 (60.6%)	15 (4.7%)	73 (23.0%)	14 (4.4%)	24 (7.3%)	318 (7.6%)
	지역정치·지 역공약	182 (57.4%)	43 (13.6%)	76 (24.0%)	7 (2.2%)	9 (2.8%)	317 (7.5%)
	후보자개인 신상	108 (45.6%)	18 (7.6%)	69 (29.1%)	32 (13.5%)	11 (4.2%)	238 (5.7%)
	의정·정치활 동	76 (52.8%)	20 (13.9%)	36 (25.0%)	5 (3.5%)	8 (4.9%)	145 (3.4%)
	선거운동·캠 페인	231 (64.7%)	10 (2.8%)	98 (27.5%)	12 (3.4%)	6 (1.7%)	357 (8.5%)
	단순한 감정 표현	277 (24.2%)	33 (2.9%)	801 (70.0%)	19 (1.7%)	15 (1.3%)	1,145 (27.2%)
	광고·장난***	407 (45.9%)	24 (2.7%)	149 (16.8%)	11 (1.2%)	296 (33.4%)	887 (21.1%)
	기타	315 (39.2%)	29 (3.6%)	168 (20.9%)	10 (1.2%)	281 (35.0%)	803 (19.0%)
	합 계	1,788 (42.5%)	192 (4.6%)	1,470 (34.9%)	110 (2.6%)	650 (15.4%)	4,210 (100%)

* 내용 서술 형식은 사실적 근거나 논리적인 전개형식을 위주로 작성된 경우에는 논리적, 주로 사실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인 표현을 위주로 작성된 경우에는 감정적인 형태로 구분하였다.

** 기타는 단순한 기호, 화상 등과 같이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 광고·장난을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별도 분리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임.

**** Pearson Chi-square=2169.892, df=28, sig.<.000

주제들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해 보면, 후보자 게시판의 구조적 성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제시된 내용은 ‘단순히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찬양하는 감정 표현’이 1,145개(27.2%)로 가장 많았고²¹⁾, 그 다음으로 ‘광고나 장난’과 같은 내용이 21.1%(887개)였다. 반면에 흔히 정치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전반이나 중앙정치에 관한 내용

21) 단순한 감정표현이란 예를 들어 “000후보 파이팅”, “힘 내십시오”와 같은 격려문과 “뻔뻔하군요”와 같은 비방·욕설들과 같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게시물들을 말한다.

(7.6%)’, ‘지역정치나 지역공약(7.5%)’, ‘후보자의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8.5%)’에 대한 주제들은 모두 합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게시판 공간의 논의가 정치 본질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사이버공간의 사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공공 이슈나 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잡음적 성격이 강한 광고·장난(21.0%, 887개), 기타(19.0%, 803개)의 주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속의 민주주의에서 기대하는 공공 이슈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숙의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내용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논리적 표현(47.1%)이 감정적 표현(37.5%)보다 약간 많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서술형식의 표현이 77.4%로 의문형 내용(6.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게시판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한 감정표현’의 경우에는 감정적 서술형이 801개(7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정치전반이나 지역정치, 선거캠페인²²⁾, 의정활동 등에 관한 내용들은 비교적 논리서술형 내용이 많아 차이를 보였다. 결국 이 같은 결과는 게시판 공간에서 정치전반이나 지역정치, 의정활동과 같은 정치본질과 관련된 의제가 많아지면 합리적 토론이 많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하겠다. 그렇지만 후보자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한 선거캠페인 수단으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는 지금과 같이 그러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더불어 각각의 주제들이 어떤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

22) 선거캠페인관련 내용은 주로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즉 “불법선거운동”, “선거유세내용에 대한 비판”, “판세 관련 내용”들을 말한다. 하지만 선거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후보자신상, 중앙정치, 지역정치, 후보자의 정치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경우에는 해당 주제로 코딩하였다. 예를 들면 “상대후보자가 당신의 과거 경력을 주로 공격하고 있더군요”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경력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면 후보자 신상으로 분류하고, 단순히 경력을 문제삼는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면 선거캠페인으로 분류하였다.

<표-6> 게시물내용 주제와 내용방향과의 교차분석 결과

	긍정적	부정적	중립	기타	전체
정치 전반	101(31.8)	103(32.4)	49(15.4)	65(20.4)	318(7.6%)
지역정치	184(58.0)	58(18.3)	43(13.6)	32(10.1)	317(7.5%)
개인 신상	81(34.0)	132(55.5)	12(5.0)	13(5.4)	238(5.7%)
정치 능력	58(40.0)	69(47.6)	11(7.6)	7(4.8)	145(3.4%)
선거 운동	217(60.8)	77(21.6)	22(6.2)	41(11.5)	357(8.5%)
단순한 감정표현	1,024(89.4)	60(5.2)	43(3.8)	18(1.6)	1,145(27.2%)
광고·장난	265(29.9)	20(2.3)	146(16.5)	456(51.4)	887(21.1%)
기타	280(34.7)	87(10.8)	114(14.2)	328(40.2)	803(19.0%)
전체	2,210(52.5)	606(14.4)	440(10.5)	954(22.7)	4,210(100%)

* Pearson Chi-square=1620.946, df.=21, sig.<.0000

데, <표-6>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이 52.5%로 가장 많았지만, 주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단순한 감정표현’ 게시물 중에 1,024개(89.4%)가 긍정적 표현인 반면, ‘후보자 개인 신상’에 관한 게시물들은 부정적인 표현이 55.5%(132개)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후보자 개인 신상’, ‘후보자 정치능력’ 등에 대해 부정적 표현이 많았던 반면, ‘선거운동’과 ‘단순한 감정표현’, ‘지역정치 관련 주제’은 긍정적인 표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전반·중앙정치’에 관한 내용은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이 반반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게시판 공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지지형태의 단순 감정표현 내용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토론이 속의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속의 조건인 ‘말하기’라는 ‘개인적’ 주관의 표출행위와 ‘듣기’라고 하는 ‘시민적 정신’의 발현행위가 결합되는 과정(박승관, 2000, p.175-176)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게시판 공간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지배한다는 것은 자기성찰성이 결여된 ‘말하기(to speak)’만 있을 뿐, 또 다른 요건인 ‘듣기(to

hear)'가 결여된 공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토론을 강조하는 네티즌의 요건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게시판 공간이 선거캠페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결과가 보여주듯이 주로 선거와 직접 관련된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선거캠페인' '지역정치'와 같은 주제들은 긍정적이었던 반면, '후보자 개인신상' '의정 및 정치활동' 등의 주제들은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는 점은 그러한 성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정치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나 합의보다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기존 매스 미디어의 왜곡된 여론정치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사이버 공간 역시 매스 미디어와 같이 공공 영역 왜곡현상이 재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성향은 곧 사이버 민주주의가 감정적인 인신공격의 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보여 주는 부분이다.

3. 사이버 정치게시판의 익명성 분석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민주주의 혹은 속의 민주주의의 장로서의 가능성과 정치적으로 무가치한 배설과 소음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이유는 사이버 공간이 '익명성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참여자의 책임과 윤리의식 즉, 시민성을 강하게 요구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것은 어쩌면 자유와 책임이라는 속의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이 요구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선 후보자 게시판에 실린 게시물을 보면, 실명자가 46.7%(1,956명)인 반면 가·차명으로 올린 게시물도 42.3%(1,821개)나 되었다. 또 자신의 e-mail 주소를 공개하는 정도의 부분적으로 신분을 밝히는 경우가 7.1%(299개), 아무런 신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익명작성자는 1.1%(47개)였다. 이러한 유형들 모두를 익명적 게시물이라고 본다면 전체적으

<표-7> 게시물작성자와 실명여부간 교차분석 결과

	실명	부분실명	가·차명	익명	기타	전체
해당지역 유권자	798(47.1)	26(1.5)	837(49.4)	12(0.7)	20(1.2)	1,694(40.3%)
소속정당 후보자	349(43.9)	146(18.4)	280(35.2)	3(0.4)	18(2.1)	796(18.9%)
상대정당 후보자	15(48.4)	2(6.5)	13(41.9)		1(3.2)	31(0.7%)
다른지역 유권자	81(62.8)	1(0.8)	41(31.8)	4(3.1)	3(1.6)	130(3.1%)
친구·친척·후원자	113(71.1)	4(2.5)	37(23.3)	1(0.6)	4(2.5)	159(3.7%)
중앙당 동료후보	86(74.8)	4(3.5)	25(27.1)			115(2.7%)
광고·장난	186(35.0)	91(17.1)	251(47.2)	4(0.8)	1(0.2)	533(12.7%)
기타	337(44.9)	25(3.3)	337(44.9)	23(3.1)	30(3.9)	752(17.9%)
전체	1,965(46.7)	299(7.1)	1,821(43.3)	47(1.1)	78(1.9)	4,210(100%)

* Pearson Chi-square=517.699, df.=28, sig.<.000

로 약 절반 정도가 익명성의 게시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반드시 부정적으로 결론내릴 수는 없다. 그것보다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익명을 사용하고 있고, 그 주제나 내용전개방식, 표현방향 등이 어떻게 익명성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익명적 사이버 게시판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고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우선 익명을 사용한 작성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면(<표-7>), 가·차명과 같이 익명을 사용하는 정도가 가장 많았던 사람들은 주로 해당지역 유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837명, 49.4%). 여기에 완전한 익명 작성자까지 포함하면 해당유권자의 절반이상이 익명의 참여자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익명작성자가 많았던 사람들은 광고·장난(47.2%)과 기타(44.9%)의 게시물들이었다. 이같이 광고·장난과 같은 정치와 무관한 내용들이 익명적인 것이라는 것도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치 게시판의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러한 게시물들이 결코 양적으로 적은 비율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다른 지역유권자(62.8%), 친구·친척·후원자(71.1%), 중앙당이나 동료후보자(74.8%)들은 실명으로 게시물을 올린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계층으로서 굳이 익명으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

〈표 - 8〉 게시물 내용 주제와 실명여부 교차분석 결과

	실명	부분실명	가·차명	익명	기타	전체
정치전반	166(52.2)	5(1.6)	140(44.0)	1(0.3)	6(1.9)	318(7.6%)
지역정치	126(39.7)	20(6.3)	169(53.3)		2(0.6)	317(7.5%)
개인신상	82(34.4)	6(2.5)	147(62.2)	1(0.4)	2(0.8)	238(5.7%)
정치능력	73(50.3)	5(3.4)	67(46.2)			145(100%)
선거운동	163(45.7)	17(4.8)	176(49.3)		10(3)	357(100%)
단순 표현	608(53.1)	14(1.2)	481(42.0)	9(0.8)	33(2.9)	1,145(100%)
광고·장난	363(40.9)	125(14.1)	369(41.6)	11(1.2)	19(2.1)	887(100%)
기 타	386(48.1)	107(13.3)	274(34.1)	23(2.9)	15(1.9)	803(100%)
전 체	1,965(46.7)	299(7.1)	1,821(43.3)	47(1.1)	78(1.9)	4,210(100%)

* pearson chi-square=323.614, df.=28, sig.<.0000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익명으로 작성된 게시물들이 주로 어떤 주제들인가를 알아본 결과(〈표-8〉), 가장 많이 가·차명이 사용된 주제는 후보자 개인신상(62.2%), 지역정치(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명을 많이 사용한 주제들은 정치 전반(52.2%), 후보자의 정치능력(50.3%), 단순한 감정표현(53.1%) 순이었다. 문제는 후보자 개인신상이 가장 많이 익명으로 작성된 주제라고 하는 점이다. 물론 이번 선거가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후보자의 전과, 납세기록 발표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후보자 개인검증위주의 선거양태로 옮겨간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황근, 2000). 그렇지만 이같이 선거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익명성이 높다는 점은 사이버공간의 정치토론을 비합리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 신상과 관련된 주제들이 가장 익명적이라고 하는 점은 주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합리적 토론이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감정적 토론이 유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터넷 공간이 주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맞추어진 것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익명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토론을 욕설이 난무하는 중상·모략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9> 게시물 실명여부와 내용전개형식

	실명	부분실명	가·차명	익명	기타	전체
논리서술형	929(51.9)	99(5.5)	706(39.5)	10(0.6)	45(2.5)	1,789(52.5%)
논리의문형	75(38.5)	11(5.6)	101(51.8)	5(2.6)	3(1.5)	195(100%)
감정서술형	667(45.3)	38(2.6)	748(50.8)	12(0.8)	6(0.4)	1,471(100%)
감정의문형	40(36.4)		66(60.0)		4(3.6)	645(100%)
기 타	254(39.4)	151(23.4)	200(31.0)	20(3.1)	20(3.1)	78(100%)
전 체	1,965(46.7)	299(7.1)	1,821(43.3)	47(1.1)	78(1.9)	4,210(100%)

* Pearson Chi-square=442.789, df.=16, sig.<.0000

이처럼 사이버 공간의 익명적 특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토론이 합리적이거나 합의를도출적이지 못하고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는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익명적인 게시물들이 많을수록, 그 내용은 논리적이라기 보다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더구나 선거라는 상황과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이 지지자들의 감정확인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할 때, 그럴 개연성은 더욱 높다 할 것이다.

그러한 예상은 게시물 실명여부와 내용간의 교차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표-9>와 <표-10>), 우선 가·차명 게시물의 경우에는 감정의문형 내용전개가 6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정서술형(50.8%), 논리의문형(51.8%)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실명 게시물의 경우에는 논리서술형 내용이 5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이 논리적 표현보다 감정적인 표현이 공간을 지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적 게시물과 부정적 게시물간에 익명성 여부는 완전히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실명적 게시물인 경우 긍정적 내용이 많았고(52.7%) 부정적 내용의 게시물은 가·차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61.5%).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이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주제의 선택, 논리 전개방식, 표현의 방향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익명성이라는 기술적 속성은 사이버정치의 본질적 속성으로, 개선될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

〈표-10〉 게시물 실명여부와 게시물 방향

	실명	부분실명	가치명	익명	기타	전체
긍정문	1,165(52.7)	68(3.1)	923(41.8)	11(0.5)	40(1.8)	2,210(52.5%)
부정문	218(36.0)	6(1.0)	372(61.5)	5(0.8)	4(0.7)	606(14.4%)
중립문	209(47.5)	53(12.0)	147(33.4)	12(2.7)	19(4.3)	440(10.5%)
기타	373(38.9)	172(18.0)	379(39.6)	19(2.0)	17(1.8)	954(22.8%)
전체	1,965(46.7)	299(7.1)	1,821(43.3)	47(1.1)	78(1.9)	4,210(100%)

* Pearson chi-square=783.955, df. 16, sig.<.0000

로 변질될 수 없는 속성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사이버게시판이라는 속성이 기존의 매스 미디어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공공 영역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사회적,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다.

4. 게시판 방문자(lurker) 분석

사이버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린다는 것이 적극적인 정치참여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게시물을 방문하는 것은 그보다는 소극적인 정치참여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Schneider(1996)의 분석과 같이 게시판 게시물의 절반은 소수 적극참여자이고 대부분은 소극적 방문자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판 방문횟수는 분명 게시판 토론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소극적 방문자들이 적극적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식견이나 태도에 있어 낮기는 하지만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선거에서 후기결정자 혹은 미결정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소극적 방문자의 분석은 게시판의 정치적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의 정치적 속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게시물 노출 자체도 정치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나타난 1개 게시물당 평균 방문횟수는 26.8개였다. 물론 전혀 방문하지 않은 게시물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방문한 것간에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게시물은 379회로 허태열 후보의 311번 게시물이었다.

먼저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도를 보여 주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내용의 긍정·부정과 같은 표현방향성과 내용형식, 그리고 응답유형간에 방문횟수에서의 차이였다. 즉 부정적인 게시물은 평균 34.16회의 방문횟수를 기록한 반면 긍정적인 게시물은 평균 26.22회로 매우 적었다. 또한 감정의문적 게시물은 평균 36.74회로 다른 유형들과는 방문횟수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응답유형에 있어서도 반론제기의 게시물이 평균 59.58개로서 단순 응답(30.09회)이나 재질문(30.47회)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게시물의 제목만 보고 방문자들이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물론 사이버 게시물 제목이 내용보다 더 자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문자들의 선택성이 많이 작용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정치 사이버게시판 방문자들의 속성 역시 대단히 감성적이고 자극추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이버공간의 게시물과 토론을 더욱 자극적이고 감성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성적 게시물 혹은 제목들의 게시물에 대한 방문자가 많을 경우에 게시판의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성은 방문한 게시물 주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앞서 게시물 분석결과와는 달리 후보자 개인에 관한 주제가 평균 40.15회로 다른 주제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운명한 게시판의 전체적인 성격과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이상적인 공적 토론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게시물 분석보다는 방문횟수의 분석이 더 극단적인 결과

<표-11> 후보자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물 방문회수 차이 분석 결과

작성지	해당지역	후보자	상대정당	다른지역	친구,친척	중앙당,후보	광고·장	기	sig.
	유권자	소속정당	후보자	유권자	후원자	상호지원	난	타	
	29.20	21.60	23.03	28.92	26.28	26.70	17.92	29.06	.000
실명여부	실명	부분실명 (e-mail)	가명, 차명	무기명				기타	sig.
	25.82	18.70	27.77	22.85				23.43	.000
내용의 긍정·부정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기타	sig.
	26.22	34.16	24.94					21.22	.000
내용형식	논리서술	논리의문	감정서술	감정의문				기타	sig.
	25.41	26.16	28.00	36.74				21.70	.000
응답유형	응답	재질문	반론제기					기타	sig.
	30.09	30.47	59.58					37.33	.000
응답주체	해당지역 유권자	후보자, 소속정당	상대정당 후보자	다른지역 유권자	친구·친 척 후원자	중앙당,후보 상호지원		기타	sig.
	36.78	28.00	28.40	32.08	73.67	35.00		43.26	.000
주제	정치전반 중앙정치	지역정치 지역공약	후보자 인신공격	의정활동 정치활동	선거운동 캠페인 등	단순한 감정적표현	광고 ·장난 안부연락	기타	sig.
	29.80	27.79	40.15	30.24	28.83	26.61	20.43	23.86	.000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인터넷활용도가 높거나, 적극적인 지지자 또는 반대자이거나, 혹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일 경우가 많아 메시지 처리에 좀 더 신경을 쓴 반면, 단순 방문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심리적 부담 없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에 있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IV. 맺음말 : cyberagora! or cyberagora?

최근 인터넷 정치공간이 많아지면서 흔히 고대 그리스시대 아고라(agora)가 가상공간에서 다시 부활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심지어는 고대 그리스 직접민주주의의 장이었던 아고라가 인터넷공간에 재현된다고 해서 사이버아고라(cyberagora)라고도 한다. 이처

럼 사이버공간에서 속의 민주주의 실현을 기대하는 이유는 사이버공간에 기술적 기대감과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우선 사이버아고라(cyberagora)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²³⁾ 조금 장황하겠지만 그리스시대 아고라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렵듯이 윤곽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아고라(agora)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상징이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였다. 헬레니즘시대에 아고라는 교차로 사이에 만들어진 빈 공간에 성소(聖所)가 들어서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전과 민회장, 평의회실, 법원 등과 같은 것들이 들어서면서 발생하였다. 즉, 도시국가 시대 아고라는 “국가에 소속된 무정부적 공간”이었던 것이다. 아고라는 사유지와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었지만, 과두정치 시대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나 종교적 과실을 범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의 토론은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어서 항상 불안정하였다. 때문에 고의적인 악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서로 비판하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 한마디로 아고라는 정보 교환과 토론의 장인 동시에 유언비어와 음모의 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아테네의 아고라는 중상모략이 심해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와 같이 민중을 옹호하는 사람이나 Plato처럼 귀족옹호적 사람 모두가 아고라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고라는 장사꾼들에 의해 지배되면서 더 이상 정보교환과 토론의 장 즉, 정치와 도덕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아고라의 비극을 보면서 사이버아고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민주주의공간은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지 현실은 분명 아니다. 그리스 아고라와 사이버아고라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사회현상이 차별 없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 아고라처럼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나 사이버 정치공간은 대단히 취약하

23) 이 부분에 대해서는 Corrine Coulet(1996/1999, p.67-77)를 참조하였다.

다. 후보자 게시판 내용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의 사이버정치 공간은 합리적인 이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공공토론의 장이라기 보다는,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의 세력규합장, 지지자들의 자기확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 숙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과되지 않은 즉각적이고 감성적인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그리스 아고라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이다. 이로 인해 사이버 공간은 책임있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욕설과 비방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숙의 민주주의론자들은 성숙된 인간 즉,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시민적 요건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박승관, 2000; Dahlgren, 1995, p.17-21). 즉, ‘개인성’과 ‘시민성’이라는 숙의 민주주의나 네티즌의 요건 등은 바로 그러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이 사이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한다(Hacker, 1996, p.213-232). 하지만 그러한 대안들 모두가 현실적이거나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시민성이라는 인간적 조건이 우선 성숙되어야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숙의 민주주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의 의미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고, 정책적으로 사이버공간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이버공간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안적 정치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기술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담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제약받지 않는 인간의 표현이 지배하는 ‘무중력의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미디어 정치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학자들의 다분히 희망 섞인 전자민주주의론들은 이상형으로서 하나의 지향점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새로운 정치의 종점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강상현(2000, p.135)이 제시한 전자

민주주의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시민적 요건 중에서 가장 뒤져 있는 부분이 시민적 요건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기술적 요건들은 이미 정치토론과 여론형성 단계에 돌입해 있고, 제도적 요건은 정보습득단계를 벗어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시민적 요건은 정보습득단계조차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속의적 전자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적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는 균형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감시사회론과 같이 전자민주주의의 장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과 같이 전자시스템에 의한 권위적 정치 부활에 대한 경계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속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사이버 공간이 반드시 실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에 불과함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정치 기술은 인간이 그 효용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기술 자체가 그것을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신문이나 방송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민주적인 매체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 참고문헌

- 강상현(1999), 「전자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사이버스페이스의 참여민주적 공간화를 위하여」, 크리스찬 아카데미 시민사회정보포럼(편), 『시민이 열어가는 지식정보사회』, 대화출판사, 133-158쪽.
- _____(1996),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 뉴미디어 패러독스』, 한나래.
- 권혁남(2000), 「사이버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평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으로 시민참여 높여야」, 《뉴미디어저널》 2000. 4., 37-40쪽.
- 나도삼(2000), 「16대 총선에 나타난 네트워크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0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박선희(2000), 「컴퓨터매개정치외 패러독스」, 《한국언론학회》 제44-4호, 61-101쪽.

_____ (1998),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문학박사 학위논문.

박승관(2000),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회》 제45-1호, 162-194쪽.

백옥인(1999), 「네트 사용자의 사회적 성격」, 《계간 동향과 전망》 통권 제40호, 285-302쪽.

_____ (1998),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문학과지성사.

오택섭, 김대식, 강미선(2000),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통권 제6호(2000-2), 71-103쪽.

오택섭(1997), 「인터넷 연구의 영역과 현황 및 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통권 제1호, 6-28쪽.

윤석년(2000), 「선거와 인터넷: 사이버 선거운동의 현황과 전망」,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문화연구소 주최, 제16대 총선과 언론: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과제와 전망 세미나 발제문.

윤영철(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숙의 민주주의」, 《한국방송학회》 통권 제14-2호, 101-150쪽.

_____ (1998),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총련에 관한 토론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제43-1호, 188-218쪽.

이유진(1997), 「PC통신, 인터넷과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1호, 141-164쪽.

조성대(2000), 「지역주의와 인물투표 : 부산시 북강서을 선거구」, 김용호 외, 『4.13총선: 캠페인사례연구와 쟁점분석』, 문형출판사, 123-151쪽.

한상희(1998), 「전자민주주의의 헌법적 수용과 과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 여」, 한국공법학회주최 헌법제정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 <민주헌정과 국가정보화: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공법적 과제> 발표문.
- 홍성태(1999), 「사이버문화: 개념, 특성, 이미지」, 《계간 동향과 전망》 통권 43호, 77-99쪽.
- 황 근(2000), 「언론의 선거보도행태와 선거결과」, 김용호 외, 『4.13총선: 캠페인사태연구와 쟁점분석』, 문형출판사, 187-226쪽.
- Abramson, J. B.(1995)., “Electronic Town-meeting: Proposals for Democracies Future,” presented to The Annenberg Scholars Program Conference on Public Space, Philadelphia: PA.
- Allen, D. S.(1995), “Theory of Democracy and American Journalism: Creating and Activ Public,” A Papers Presentations at AEJMC, Washington D.C.
- Arterton, F. C.(1987), *Teledemocracy : Can Technology Protect Democrac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Bell, D.(1973), *The Coming of the Post 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Y.: Basic Books.
- Beniger, J.(1996), “Who Shall Control Cyberpace?” in Strate, L., R. Jacobson & S. B. Gibson(eds.), *Communication and Cyberspace : Social Interaction in Electronic Environment*, N.J.: Hamton Press.
- Calabrese, A. and Mark Borchert(1996), “Prospects for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Rethinking Communication and Social Policy,” *Media , Culture and Society*, Vol.18.
- Cleave Jr., Harry M.(1998), “The Zapatista Effect: The Internet and the Rise of an Alternative Political Fabric,”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51 No.2, pp. 621-640.
- Corrine Coulet(1996), *Communiquer en Grece Ancienne*, 이선화(역)(1999), 『고대 그리스의 의사소통』, 영림카디널.
- Crotty, W. J. & Jacobson, G. C.(1980), *American Parties in Declin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Dahlren, P.(1995), “Television and the Public Sphere: Citizenship,”

- Democracy and the Media*, London: SAGE Publications.
- Denton Jr., R. E. & Gray C. Woodward(1998), *Political Communication in America*,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 Dionne, E, J.(1991), *Why Americans Hate Politics*, N.Y.: Simon & Schuster.
- Ess, C.(1996), "The Political Computer: Democracy, CMC and Habermas,"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 Fisher, B., Magolis, M. & Resnick, D.(1996), "Breaking Ground on the Virtual Frontier: Surveying Civic Life on the Internet," *The American Sociologist*, Vol.27 No.1.
- Fishkin, J.(1995), *The Voice of People: Public Opinion and Democrac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Garnham, N.(1992), "The Media and the Public Sphere," in C. Calhoun(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A: MIT Press.
- Gitlin, T.(1995), *The Twilight of Common Dreams*, N.Y.: Metropolitan Books.
- Glasser, Theodore L.(1999), "The Idea of Public Journalism," in Glasser, Theodore L(ed), *The Idea of Public Journalism*, N.Y.: Guilford.
- Grosswiler, P.(1998), "Historical Hopes, Media Fears, and the Electronic Town Meeting Concept: Where Technology Meets Democracy or Demogogy?,"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Vol.22 No.2, pp. 133-152.
- Habermas, J.(1981), T. McCarthy(trans.)(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1, Boston, MA: Beacon.
- _____(1962), T. Turner(trans.)(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A.: The MIT Press.
- Hacker, K. L.(1996), "Missing Links in the Evolution of Electronic Democratization," *Media, Culture & Society*, Vol.18, pp. 213-232.
- Hauben, Michael(1997), "Netizens: On the History and Impact of Usenet and the Internet," *IEEC Computer Society*.
- Jacobson, R.(1996), "Are They Building an Off-ramp in My Neighbor-

- hood? and Other Questions Concerning Public Interest in and Access to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in Strate L., R. Jacobson & S. B. Gibson(eds.), *Communication and Cyberspace: Social Interaction in Electronic Environment*, N.J.: Hamton Press.
- Johnson, D.(1999), "Politics in Cyberspace," *The Futurist*, Vol.33 No.1.
- Leary, T.(1994), 홍성태 역, 『대항문화들』, 홍성태 편역(2000), 『사이버공간과 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 London, S.(1995), "Teledemocracy vs. Deliberate Democracy: A comparative Look at Two Models of Public Talk," *Journal of Interpersonal Computing and Technology*, Vol.3 No.2, pp. 33-55.
- Perrolle, J.(1991), "Conservations and Trust in Computer Interfaces," in Dunlop, Charles & Robert Kling(eds.),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NY: Academic Press.
- Peters, J. D.(1993), "Distrust of Representation: Habermas on the Public Sphere," *Media, Culture & Society*, Vol.15 No.4.
- Poster, M.(1997), "Cyberdemocracy: Internet and Public Sphere," in Porter, David,(ed.), *Internet Culture*, London: Routledge.
- Rheingold, H.(1994),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NY: Harper Perennial.
- Robins, K. and F. Webster(1999), *Times of the Technoculture: From the Information Society to the Virtual Life*, London: Routledge.
- Schneider, S. M.(1996), "Creating a Democartic Public Sphere through Political Discussion: A Case Study of Abortion Conversation on the Internet,"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Vol.14, N0.4, pp. 373-393.
- Sennett, R.(1977), *The Fall of Public Man*, N.Y.: Knopt.
- Strek, John M.(1998), "Pulling the Plug on Electronic Town Meetings: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Reality of the Usenet," in C. Toulouse & T. W. Luke(eds.), *The Politics of Cyberspace*, pp.297-309.
- Sunstein, C. R.(1995),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Yale law Journal*, Vol.104, No.1757.
- Sunstein, C. R.(1993),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N.Y.: The

Free Press.

Teranian, M.(1990), *Technologies of Power: Information Machines and Democratic*, N.J.: Perspects, Ablex publishing Co.

Toffler, A.(1990), *The Third Wave*, N.Y.: Bantam Books.

Walzer, M.(1992), "The Civil Society Argument," in C. Mouffe(ed.), *Dimensions of Radical Democracy*, London: Verso.

Warf, B. and John Grimes(1997), "Counterhegemonic Discourses and the Internet," *Geographical Review*, Vol.87, No.2, pp. 259-275.

Wasco, J. and Mosco, V(eds.)(1992), *Democratic Communications in the Information*, Toronto: Garamond Press and Norwood, NJ: Ablex

■ Abstract

Empirical Analysis of Political Communication Mode at Cyberspace

This study is focused on forecasting the future of tele-democracy. Many Scholars expect that internet provides technological space needing realizing the tele-democracy or deliberate democracy. Especially in Korea, this expectation is higher than other nations because of political corruption and inefficiency. Therefore internet is intended to considering as new technologies reforming political process.

In 16th the general election period, many candidates established home page and used as election campaign tool. And a little of home pages is payed attention to among voters. In spite of using internet as political medium, many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ers have a doubt that internet will realize ideal direct democracy. It's reason is that internet is open and anonymous space. At anonymous space, communication participators is tended to be irresponsible and non-serious. Therefore it is hard that cyber-politics will be ideal type of democrac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d how participators

communicate with others at cyber bulletin board establishing candidate's home pages. Main research questions is how do discussions at cyberspace fulfill the conditions of deliberate democracy. Therefore, concrete questions include; who are participators at candidate's cyber bulletin board; which pattern do they communicate; what is the theme of communication; which effects do the anonymous character of cyberspace influence.

To that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on 4,210 written matters at 82 cyber bulletin boards of candidate's home page establishing during 16th the general election period. It can be found that cyberspace in Korea still is not deliberate democracy space and not will be. Firstly, discussion patterns at cyber bulletin board is "candidate with supporters communication space. To be exact, it is said that candidate's home page is "the space of self-convincing among supporters." Secondly, the main themes of discussion are simple emotional expressions; "I support you!" "Fighting" "Be vigor" etc. By contrast, real political contents - central or local political matters - is relatively few. In the mode of expression, real political messages are more positive, logical than simple expressions, candidates private matters. Especially this characteristic will make cyberspace as "mutual slander space" consolidating anonymous characteristic of cyberspace. Finally, Cyberspace in Korea still is not real "public sphere" realizing deliberate process. Therefore to be real public sphere, it is needed to participant's ethical maturity and political citizenship.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that cyberspace will reconstruct the Athene's Agora. On the contrary, Cyberagora will like to be irrespectable area fulfilling the sweeping. Making the deliberate space, technological possibility and ethical condition will have to be balanced together.